
『생태복지의 길을 묻다』 정책 토론회

일 시 : 2011년 4월 22일(금) 오후 2시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생태복지의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

I. 발제

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2
발표자 : 이 상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제주 의대 교수
2. 국가, 복지 그리고 제 3의 주체 15
발표자 : 우 석 훈 2.1 연구소 소장
3.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25
발표자 : 이 정 필 에너지기후경제연구소 연구원

II. 참석자 전체 토론

발제 I

역등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이 상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외대 교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이 상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의대 교수)

1.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복지국가의 필요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이 주도한 '경제적 자유주의' 정책 패키지의 작동으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시작한 지 벌써 13년이다. 엄청나게 변했다. 공기업과 은행들은 수없이 민영화되었고, 금융자유화와 생산체제의 양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소비를 포함한 사회전반의 양극화와 민생의 불안은 우리 국민의 행복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으로 묶어 두고 있다. 이대로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였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반기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촛불의 항거에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역동성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최근 40여 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단기間に 이루어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가히 눈부시도록 대단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독립 국가들이 생겨났고,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사회의 발전을 추구해왔지만, 성공한 사례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와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1970년대 본격화된 중화학공업 중심의 압축적인 경제발전,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공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복지 인프라는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이다. 이러한 역동성의 경제적 배경에는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던 '발전국가론'이 있다. 이 발전경제학이 군사독재와 인권유린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였음에도 유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국가주도형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민주화 운동의 성공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런데 1990년대 중후반 이래,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전면적 수용으로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을 지속하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들은 감세를 통해 정부의 재정능력을 축소하고, 각종 경제사회적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자본과 시장에 대한 정치와 국가의 제도적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또,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체제로서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를 출현케 하였는데, 금융이 생산에 봉사하는 고유한 기능에서 벗어나 생산자본에 대해 우위에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립화하였다. 이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비판받아 왔던 바, 실제로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그 원리가 ‘자유시장 지상주의’이므로 본질적으로 양극화 성장체제다. 이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렵게 되었고, 중산층까지도 경제사회 생활의 불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소위 ‘범 불안시대’를 맞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를 민생의 ‘5대 불안’으로 널리 홍보해왔는데,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 의료 불안이 그것이다. 우리 국민은 만성적 불안 속에서 개인주의, 자기책임, 경쟁지상, 시장만능을 강조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불안 회피책을 찾느라 분주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안은 심화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생존본능에 따라 자신만의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바, 여기서 창의적 사고와 기업가적 도전정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므로 경제사회의 역동성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된다. 가령,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장래가 불확실한 이공계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의대나 법대를 앞 다투어 진학하거나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공공부문 등으로만 몰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사회구조와 보편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체제 탓이다. 세상은 정글처럼 약육강식 사회로 변해가는데, 제도적 복지는 미약하여 개인과 가족의 안정적 삶을 보호해주지 않는 조건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피동적 자기보호’뿐이다. 이의 집합적 결과는 경제사회의 역동성 저하이며, 사회전반과 민생의 불안 심화다.

그런데 이 속에서 희망의 싹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불안과 위기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국가와 복지와 세금’에 대해 저항감을 키워오며 자유경쟁과 시장만능의 성장주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를 요구하며,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기본소득(아동수당, 실업급여, 노후소득 등)과 사회서비스(보육, 교육, 의료, 요양)를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제도화된다면 기꺼이 누진적 방식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한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의 상황과는 현저히 다른 것이다. 2007년 당시, 참여정부에 피로감과 실망을 느낀 많은 국민들이 “부자 되세요”라며 장밋빛 성장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진영에 최후의 기대를 걸며 현 정권을 선택했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그 선택이 잘못 되었음을, 각자도생의 시장만능주의가 더 이상 우리의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명박 보수정권의 무능 탓도 크겠지만, 보수진영이 내세우는 선진화 담론의 주장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현재의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어렵겠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70% 이상의 국민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미국식의 시장만능국가가 아니라 스웨덴식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은 외부의 어떤 이념적 세뇌나 좌파의 조직적 선동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발붙이고 살아온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현실, 즉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가 초래한 사회양극화와 민생 불안 그 자체다.

2. 역동적 복지국가의 3대 가치와 4대 원칙

이제 국민의 다수가 보편적 복지를 원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장차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가 아니라 스웨덴식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¹⁾ 이러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추구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는 ‘토종’형 복지국가를 추구하려는 세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올바르게 극복하고 미래의 진보를 제대로 열려는 모든 진보개혁세력과 지지자들에게는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²⁾은 존엄, 연대, 정의를 3대 가치로 삼고, 4개의 원칙을 기둥 삼아 구축되는데,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가 그것이다.

1) 김득갑. 금융위기로 명암이 엇갈리는 유럽 강소국 경제. SERI 경제포커스 제264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10.20.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북유럽 복지국가들인 핀란드는 3.9%, 노르웨이 3.0%, 스웨덴 3.6%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보였는데, 이 시기 유럽연합은 평균 2.8%의 성장률을 보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또, 이들 북유럽 강소국들은 국가경쟁력도 매우 좋아, 133개 국가 중에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전부 10위 이내에 들어 있다. 더불어, 작년에 몰아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들 국가들은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데, 금융위기를 유연하게 극복한 것이다. 위기 대응 능력은 57개 국가 중 덴마크가 1위, 노르웨이 4위, 스웨덴 7위, 핀란드 9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2) 역동적 복지국가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틀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본과 시장이 아니라 사람과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도록 하자는 논리이다.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의 대립물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전략, 즉 새로운 국가모델이다. 환경과 생태는 사람들의 상호관계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자 삶의 터전(조건)이다. 경제사회와 생태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바람직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형성, 즉 일반적으로 토건과 개발에 의존하는 경제사회체제나 자본주도의 시장만능 경제사회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사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것으로 검정 받은 경제사회체제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들 수 있겠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를 극복하고,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사회의 새로운 체제 건설에 더해, 환경생태와 평화 이슈에도 가장 친화적이다.

보편적 복지는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고용보험 등 사회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과 의료, 보육, 교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중산층을 포함한 누구나 복지의 주체가 되는 제도적 복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복지체계는 자신의 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 조건을 모두에게 제공해 주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준다. 이를 통해 삶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도전정신이 확보되는 효과까지 거두게 된다.

적극적 복지는 국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말하는데, 이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강화를 가져온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체계’의 확립과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대상별 능력개발 시스템이 중요하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성의 증대도 적극적 복지의 범주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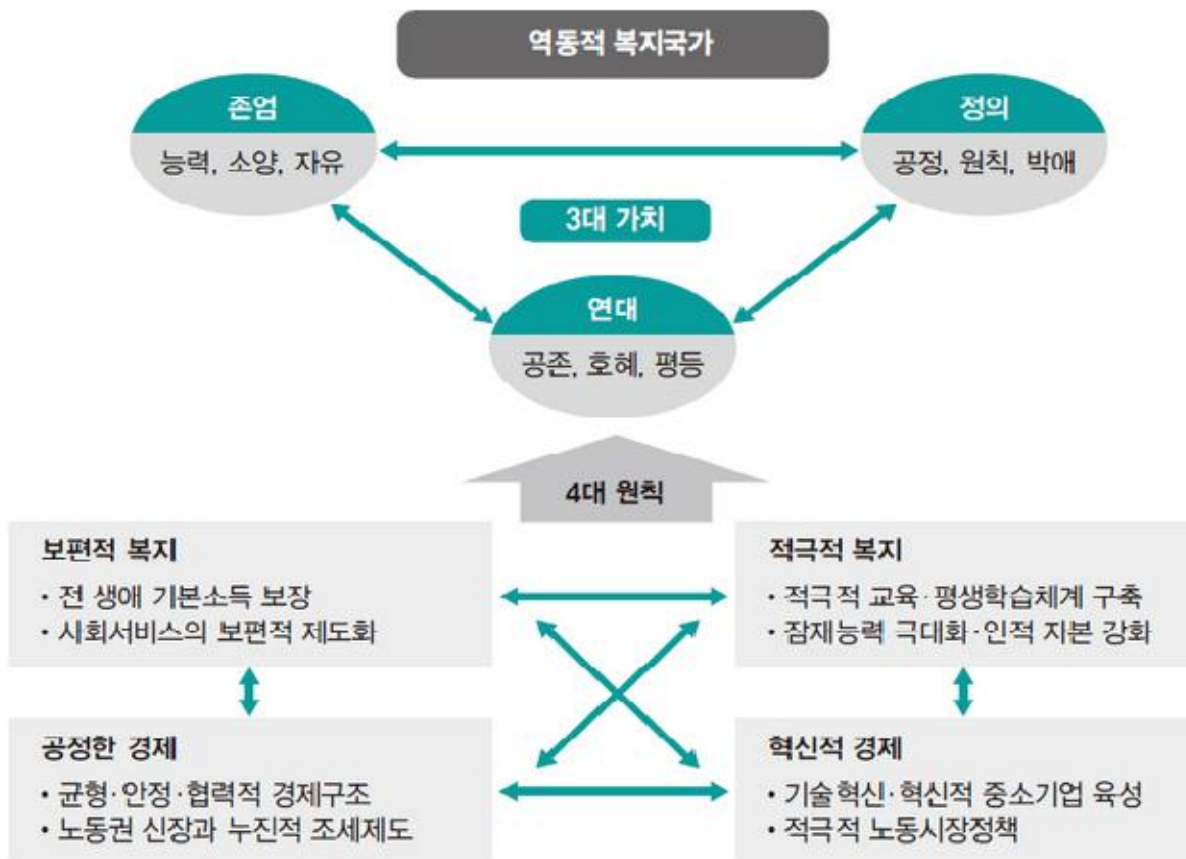
공정한 경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 공정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구축, 산업자본에 조응하는 생산적·장기적 금융자본 체계, 금융의 공공성과 중소기업 지원체계, 협력적 노사관계와 노동권의 신장, 노동시장의 양극화 극복(비정규직 최소화와 차별해소), 연대적·누진적 조세제도의 확립 등을 포함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시장과 경제제도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개입과 유능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³⁾

혁신적 경제는 창의성, 다양성, 유연성을 중시하고, 혁신적 중소기업을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체계가 요구된다.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네 가지 원칙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떼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가령, 토니 블레어 영국 노동당 정부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보편적 복지 없이 적극적 복지만을 강조’하여 이를 사회투자 국가라는 이름으로 수사적으로 강조한다면, 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3) ‘일자리 불안’의 핵심에는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놓여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 문제는 주로 중소기업, 영세사업, 자영업 등에서 생긴다. 따라서 우리는 산업과 생산체제 전반의 양극화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제의 불공정을 제압할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고, 노동권을 강화해 비정규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노동계 기준으로 현재 노동자의 52%가 비정규직인데 이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과 보편주의 국가복지를 통해 사회임금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등의 정부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그리고 장차 노동의 정규성과 무관하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접근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별 노조를 산별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경쟁력 없는 기업이 문을 닫아도, 노동자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보호되고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중소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로 창출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민주정부가 개입해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경제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개입주의 조정시장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누진적 조세와 적극적 재정정책이 포함된 '공정한 경제'나 민주정부의 진보적 산업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달성될 '혁신적 경제' 또한 '보편적 복지'나 '적극적 복지'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유기적 통합체다. 그럼에도 보수정치세력은 그동안 경제와 복지를 '성장이나 분배'의 대립적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프레임을 구축해왔다. 복지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 복지병만 유발하고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 논리를 근거로 성장주의와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체제를 고집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의 논리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고용 없는 양극화 성장과 낙수효과의 부재로 인해 이미 파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에 의하면, 경제와 복지(성장과 분배)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일체로서 유기적 통합체이다.



3. 보편주의 전략의 중요성

이제 우리에게서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라는 하나의 자본주의시기를 마감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자본주의시기를 열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 전략은 보편주의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별 구분을 넘어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복지를 보장받는 방식을 요구하고 성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지의 계층화가 극복된다. 이를 위해서는 누진적이고 연대적 조세재정 전략이 요구된다.

누진적 조세제도의 확립은 그 자체로서 시장임금의 차이를 보정해주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은 진보적 산업정책과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를 위해 지출됨으로써 산업과 경제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통합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춘 큰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기존의 파행적인 기업별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동권의 보편적 신장에 근거한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한 배'를 타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소득과 능력에 합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 없는 복지국가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장만능국가에서 보편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복지국가 혁명'을 필요로 한다. 누진적, 연대적 방식

4)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 탈 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알려진 바와 같은데, 사실 독일 등 유럽대륙의 조합주의 복지국가들도 탈 상품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독일 등의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들이 가지는 가장 큰 결함은 '탈 상품화의 수준이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계층화(stratification)' 수준이 높다는 데 있다. 일정한 특성을 공유한 노동자 그룹 또는 기업 별로 독자적인 조합들을 형성해서 조합주의 복지체제를 운영해온 오랜 역사적 유습이 노동자 그룹 또는 기업 간,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 혜택의 계층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미국도 복지의 계층화가 심각하다. 미국은 독일과는 달리 가톨릭 보수주의의 조합주의적 유습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시장자유주의 철학에 따라 기업별 복지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일찍부터 확립됨으로써 취업 노동자와 실업자 간,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엄청난 수준의 복지 격차가 존재하게 되었던 바, 선진국들 중에서 계층화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노동계급 내부의 이러한 격차와 차별은 사회정책의 보편적 발전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형국에 빠져있다. 우리나라에서 동일 사업장의 동일 노동에 종사하는 대기업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간의 엄청난 격차와 차별의 비극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보편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임과 아울러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의 통합적 발전과 조직력의 신장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 전략은 보편주의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별 구분을 넘어서서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복지와 사회권을 보장받는 방식을 요구하고 성취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의 계층화가 극복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서 보게 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편적 제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각자 알아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는데, 아마 미국처럼 우리 국민들도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뚜렷하게 계층화된 시장주의 의료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으로 세금을 기꺼이 더 내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우리 풀뿌리 시민 사회의 다수가 될 때 마침내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배’의 출항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재정(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과 비시장적 공공기관의 재정을 합한 것으로 국제비교의 기준으로 사용됨) 규모는 2010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31% 정도다. 북유럽 국가들 평균은 55%이고, 유럽연합 국가들 평균은 51%, OECD 국가들 평균은 45% 정도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14% 포인트가 더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2010년 GDP를 약 1,100조 원으로 보면, 2010년 일반정부 재정은 약 340조 원이 되고,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고령화 수준과 국민연금의 성숙도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00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원 포착 및 탈세 방지와 함께 일반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노력과 투쟁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2010년 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명목 GDP)은 19.3%로 추정되는데, OECD 평균인 26.6%(2008년)에 비해 7.3% 포인트나 낮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세금을 약 37%를 더 내야 OECD 평균수준의 조세부담률에 도달한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명목GDP)은 5.8%인데, OECD 평균이 9.1%이므로 우리나라는 현재 보다 사회보장기여금을 56% 정도 더 내야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

4.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한편, 2010년의 보편적 무상급식 의제에 이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 기꺼이 공적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을 확장하려는 중요한 시도다. 이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보편적 복지’도 ‘복지국가’도 모두 수사적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을 하나의 제도를 속에 포함하고는 있어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 유형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고, 진료시점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높아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2010년 7월 17일 출범하였던 것이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양극화로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민간의료

보험이 더 잘 팔리는 왜곡된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시장실패의 영역이자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조건에서 우리 국민들은 각자 알아서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장에서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함으로써 스스로 의료비 불안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 가계의 80%는 한 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입자 당 월평균 10만 원 이상의 민간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 1인당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는 3만 3천 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의 목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발생하는 전체 의료비 중 의료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국민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업 등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정부의 국고지원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 3주체 모두에서 지금보다 34%를 더 부담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2010년 기준 약 35조 원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48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확대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인 우리 국민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2010년 현재 국민 1인당 월평균 자기부담 국민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3만 6천 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2만 9천 원이므로,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 1천 원의 보험료만 더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확충된 돈으로 ① 상급병실, 고가의 진단과 치료, 선택 진료(특진) 등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고, ② 입원 중심 병원진료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고, ③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불안은 해소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월평균 10만 원 이상을 내면서 '실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국민은 없을 것인 바, 이는 유럽 복지국가의 의료보장제도에 근접한 모습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로 인해 실손 민간의료보험은 급속하게 시장을 확장하였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집권 1년 만에 62.2%로 떨어졌고, 2011년 현재도 계속 하강하여 50%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 공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공세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료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을 보편주의 의료보장제도로 바로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갈 길은 바쁘고 멀다. 그런데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우려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왜 국민이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느냐?"는 문제제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법률 상,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100원 더 내면 '50 대 50'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

자인 기업도 100원을 더 내야 하고, 정부도 국고에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더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전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40원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만 선제적으로 돈을 더 내는 일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기꺼이 더 내겠다는 운동이야말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말리지도 못하겠고, 수용하자니 정부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실손' 민간의료보험이 위축·소멸될 것이므로 정부와 경영계(특히, 보험회사와 금융자본)는 어쩔 줄을 몰라 절절매고 있다. 그래서 이는 실현가능한 보편주의 복지의 최고 전략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인상보다는 기존 정부재정의 추가 투입(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더 진보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재정은 조세로 총당되는데, 전체 조세수입의 52%는 간접세로서 그 성격이 역진적이며, 단지 25%만이 누진적(진보적)이다. 이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정률제이며,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만큼 고용주도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준조세로서 일종의 '건강보장' 목적세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는 한 하늘 아래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대립적 모순 관계, 즉 '제로섬'의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임)의 비중은 52%인데, OECD 평균은 72%, 유럽 선진국들은 대개 85%를 상회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의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 이에 반비례해서 실손 민간의료보험은 시장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는 바, 그 속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증가에 비해 4배나 빠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년 이내에 국민의료의 대부분은 민간의료보험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체계 '식교'에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병원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미국식으로 자본시장에 예속시키고, 이것을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과 짝을 짓도록 하면, 보험회사와 금융자본은 크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기업과 자본 등 우리 사회의 지배적 계층과 엘리트들에게는 돈을 벌 좋은 기회이겠으나 국민경제와 민생에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라는 '의료민영화'가 초래하는 시장실패의 낭비, 비효율, 비합리, 의료이용의 양극화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의료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는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입원 진료의 경우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답이다. 이것이 서구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이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다.

5. 마치며: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과 '복지국가 단일정당론'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이 이전과는 다른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편적 복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후 전개된 정치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없이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가족복지가 보태주었는데,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네 삶은 만성적으로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불안이다. 노동시장의 어마어마한 양극화는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10%의 좋은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무한경쟁은 대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다. 노동시장의 이러한 양극화(비정규직, 저임금노동)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감세, 규제완화, 민영화)에 기인한 것이다. 시장만능국가에 나타나는 '시장의 실패와 불완전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조정시장경제의 복지국가 경제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다음으로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필사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고 능력 되는대로 민간보험에 가입한다. 민생불안의 주요 영역인 사회서비스는 시장실패를 초래하므로 비효율적이고 비형평적이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주의 방식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편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는 산업체제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불공정성을 극복하려는 민주정부의 조정시장경제와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는 보편적·적극적 복지체제의 통합적 구조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규제, 누진적·연대적 조세, 적극적 재정 등의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유능하고 책임성 강한 민주정부를 필요로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와 선별적 복지를 고수하며 "복지의 확충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기존의 '반 복지' 담론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와 복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유기적 통합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장만능국가에서 '복지 확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복지를 보편적으로 향유하고, 불안 없이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더불어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기꺼이 능력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더 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깨어있는" 풀뿌리 시민들의 확산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믿고, 이들의

힘을 모아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복지국가 시민정치운동, 즉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이 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당의 공식 노선으로 삼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진보정당들도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는데, 특히 진보신당은 복지국가를 당의 얼굴 수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이 이렇게 복지국가 이슈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것은 일자리 등 민생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치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올려놓고 있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달성할 정치사회적 경로와 전략이 매우 중요해졌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범야권 통합 및 연대연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눈에는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될 것처럼 보인다.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

먼저, 국민의 명령 민란운동과 민주당의 민주진보통합론은 진보정당을 포함한 모든 야권세력을 한 곳에 모아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진보정당들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비민주 진보통합론은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시민사회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만든 후 총선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자는 주장이다. 이것도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먼저, 헤어졌던 두 진보정당의 통합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설사 두 진보정당의 통합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2012년 총선에서 선거연합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누가 다른 당 후보에게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신의 후보 자리를 양보하겠는가.

그런데 최근의 통합 및 연대연합 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빠져있는 것이다. 대부분은 "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연대연합(반MB 연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래서 획득한 그 정권으로 뭘 하려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이것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이 투표로 말한 바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 가치를 더욱 확산해야 한다. 전국 방방곳곳의 풀뿌리 시민들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치를 그들의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운동을 복지국가 시민정치운동, 즉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이라 부른다. 이러한

풀뿌리 보통 시민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조응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을 미칠 수 있도록 한국 정치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가치’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 더 진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진보정당은 좀 더 솔직하게 분화되어야 한다. 이념정당을 추구하는 진보정파는 진보적 이념정당으로 재편되고, 진보적 대중정당을 추구하는 진보정파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파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다수파 전략은 민주당을 포함하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을 의미한다.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기대하고 염원을 표출하는 풀뿌리 보통 시민의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에 역동적으로 상호 조응하는 한국 정치 지형의 통합적 재편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이다. 이는 기존의 ‘세력 중심 통합론’과는 달리 ‘복지국가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재편하자는 것이며, ‘중도 진보’ 영역에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통해 확장된 시민사회의 제 세력, 진보개혁 성향을 강화한 민주당 등의 야당, 복지국가의 가치에 동의하는 진보정당의 제 정파 등 모두에게 완전히 열려있는 것이다.

과거에 무엇을 했던, 현재 어디에 몸담고 있던, 이런 것보다는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구현하겠다는 의지만 뚜렷하다면, 이들 모두가 복지국가 단일정당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양 날개 전략, 즉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과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의 국민적 확산과 대대적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발제 Ⅱ

국가, 복지 그리고 제 3의 주체

우 석 훈
(21 연구소 소장)

국가, 복지 그리고 제 3의 주체

우 석 훈

(2.1 연구소 소장)

1. 케인즈 30년, 하이에크 30년, 다가오는 30년은?

세계경제는 1929년 대공황과 이어져 발생한 2차 세계대전을 대혼동기로 보고, 정상적인 경제에 대한 분석은 1945년 전후 복구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보통은 1945년에서 1~2차 석유파동에 이르는 기간까지를 '영광의 30년', 케인즈의 시대 혹은 크루그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압축(great compression) 시대'라고 부른다. 국가가 경제의 후견인으로 적극 개입하였으며, 복지체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힌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사회민주주의라고 흔히 부르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냥 사회당이라고 부르는 정당들이 이 복지국가의 흐름을 주도하였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민주의 흐름이 맞기는 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꼭 좌파 혹은 사민주의자들이 이 흐름을 만든 것은 아니다. 전후 프랑스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주도한 것은 드골주의자들이었고, 68혁명을 거치면서도 집권 세력은 여전히 보수 정부였다.

1980년 레이건, 대처 등의 등장과 함께 '시장 만능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에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90년 이후 세계화, 금융화 등의 흐름과 함께 '워싱턴 콘센서스'라고 부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흐름이 전면화된 것은 사실이다. 영국의 노동당은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의 사민주의와는 차이를 가진 정책으로 재집권에 성공하였지만, 영국의 경제가 개선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하이에크 체제가 일단 위기점에 봉착한 것을 보여준다. 물론 실제로 문제가 터진 것이 부시 재임기간이라서 공화당 혹은 네오콘 경제운동의 문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 모기지론을 통해서 중산층들에게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빌 클린턴 시절이다. '뉴이코노미'로 지칭되는 신경제 즉 IT 등에서 발생한 버블을 결국 주택 버블로 옮겨간 것인데, 이게 IB, 즉 투자은행의 대형화와 신금융상품 등과 결합되면서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화된 것이다.

여기에 한국 입장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우리는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토건화라는 또 다른 흐름 하나가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IMF 경제위기 이후 허가제였던 건설사 설립을 등록제로 바꾼 것과 환경영향평가의 무력화와 그린벨트 침탈 등, 생태적 안전판이 무너진 것이 크다. 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시기의 '건설산업 연착륙' 정책과 '한국형 뉴딜' 그리고 연이어 나온 '2만불 경제' 등 정책 기조 자체가 토건으로 잡혔고, 한국은 장기적으로 투기 경제를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는 토건이 특징이 아니라 수출 대기업 위주의 환율정책과 이자율 정책이 특징이다. 토건은 4대강을 제외하면 이전 정부가 하던 것을 이어받은 것에 가깝다.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고 '약한 원화'를 유지하면서, 수출을 하는 대기업과 내수용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내수로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어떻게 갈 것인가?

1번. 워싱턴 컨센서스로의 복귀.

한국 정부의 시대 인식인데, 잠깐의 위기가 있었지만, 4대강 등 토건으로 우리는 극복했고, 곧 세계경제는 정상을 찾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1년 G20 회의에서 EU가 투기적 자금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경세 등 제약을 거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은행세' 등 한국에서도 변형된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에 관한 한국은행 등 내부 논의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다.

IB를 축으로 하는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던 그 시절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더 이상 국경 없는 금융화가 진전될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세계 경제는 다른 식으로 전환된다.

2번. 케인즈 체계로의 복귀.

케인즈의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케인즈 좌파와 케인즈 우파로 나누는 견해가 있다. 케인즈 좌파는, 사민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 의료보험과 연금체계 등 국가 복지를 증가시키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원래 루즈벨트가 했던 농민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의미한다.

케인즈 우파는 국가의 재정을 전쟁 장치 즉 군산복합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정책을 의미한다. 냉전이라는 특별한 국제 정세가 있기는 했는데, 미국의 경우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반드시 복지의 증가만이 아니라 군산복합체의 증가의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묘하게 신자유주의와 동시에 진행된 이런 케인즈 우파의 시각이, 결국은 재정지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토건화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크루그먼과 장하준이 가진 견해는 넓게 보면, 케인즈 체계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다. 발전경제학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이러한 수렴 과정은, 자연스럽다.

아마, 생태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다면, 이 두 번째의 견해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한다.

3번. 또 다른 체계.

케인즈도 아니고, 하이에크도 아닌 또 다른 경제에 대한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맑스 체계로의 전환을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주의 자체가 현실 경제로 구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폴라니의 사회경제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의 로버트 라이시의 지적들이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사회적 경제, 지역경제, 공동체 경제, 제3부문 등 새로운 가능성의 요소들은 존재하지만, 국가 단위에서 전면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 평가가 많다.

2. 국가 복지, 희소성의 시대에?

얘기를 쉽게 정리하자면, 현재 한국에서 얘기하는 '복지'는 '국가 복지'를 전제로 한, 정당 차원에서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보자면, 케인즈 체계, 좀 좁게 보자면 케인즈 좌파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케인즈 체계에 대해서 생태진영에서 했던 가장 주요한 비판은, '대량생산 대량 소비'라는 개념에 농축되어 있다.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지구 생태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케인즈 체계는 가장 이상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계는 지구생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저개발 국가라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노동 귀족'이라는 표현은 유럽 노동자들 내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부등가 교환 혹은 주변부화라고 스스로를 인식한 중남미 학자들 사이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 구체계는 한 쪽으로는 지구 생태라는 질문에 부딪힌 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식민주의 즉 제3세계의 착취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과연 우리가 노동자들이 더 전면에 나서서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통해서 지구를 거대한 공장 처럼 돌리는 구체계 즉 케인즈의 시대로 복귀할 수 있는가?

구체계가 왜 붕괴하고 하이에크의 시대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나뉜다. 외형적으로 보면, 케인즈 시대는 석유파동과 함께 붕괴하였다. 메도우 여사의 로마클럽 보고서 등 신말더스 주의로 분류되는 비관적 견해와 함께 지구 종말론적 미래 전망들이 연달아 나오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이 문제를 '과잉 생산' 즉 소비능력이 뒤따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능력이 지나치게 확충되면서 생겨난 내부 조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시스템 내부에서 설명할 것인가, 시스템 외부에서 설명할 것인가, 그런 시각과 같다.

자, 우리가 지금 다시 케인즈의 시대로 복귀할 수 있는가?

일단 70년대와 21세기는 국제적 여건이 전혀 다르다. 70년대에는 기후변화협약 같은 건 아예 없었고, 핵발전소의 폐기 문제 같은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 시기에는 저개발국가들이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도입하면서 농업생산물이 공업생산물보다 오히려 저렴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도 풍요의 시대였고, 물질과 에너지로도 풍요의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석유는 이미 채굴량의 절반 이상을 사용했고, 남은 석유들은 심해 석유 등 '열등지'에서 나오는 석유이다. 석유를 채굴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석유량으로 환산하면, 이미 상당히 많은 유전이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채굴하는 석유보다 더 많은 석유가 들어간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채굴량과 경제적 채굴량은 분명히 다르다. 나는 석유 종료 시점이 일반적 예상보다는 훨씬 일찍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너지로서의 석유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원료로서의 석유는 대체가 좀 어렵다. 우리가 입는 합성섬유를 비롯해, BTX (벤젠, 톨루엔, 크실렌) 공정 등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제품의 중요도를 단시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아까운 석유를 겨우 자동차 운행하는

데 쓰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시점이 조만간 오게 될 것이다.

농업도 마찬가지이다. 커피 농장 등 상용작물은 토양유실을 심각하게 유발한다. 플렌테이션 방식의 한계인데, 지속가능한 농업의 눈으로 보자면, 토양유실 등 농지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의 등장과 함께 결국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2010년 이후의 이런 트렌드를 나는 '희소성의 시대'라고 부른다. 기계적으로 케인즈의 시대로 복귀하는 것은, 희소성의 시대라는 새로운 제약 조건을 맞아 한계를 맞게 될 것이다.

결국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을 줄이면서, 문화나 지식과 같은 요소의 투입을 늘리는 다른 방식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케인즈 시대로 복귀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불가능하다.

3. 복지, 국가 그리고 공동체

생태주의의 시각은 오래 전부터 복지주의의 시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도로공사와 건축 등 토건으로 가는 비용과 무기로 가는 비용을 내부 복지로 돌리면 제로성장 상태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넬라 메도우 등 제로성장론(ZEG: Zero Economic Growth)의 핵심 논의였다. 여기에 따른 부가적인 논의, 즉 ZPG(Zero Population Growth)가 이 그룹을 신팻더스주의자로 불리게 만든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토건과 무기로 가는 돈을 복지로 돌린다, 이걸 생태주의자들이 가진 오래된 복지에 대한 견해이다. 국민경제 내에서는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경우, 20대 대학생이 데이트 하는 돈을 국가가 지원할 것인가, 이것이 생태적인가 아닌가? 데이트라는 행위는 아주 복합적인 행위이지만, 세원이 4대강에 들어가는 돈을 빼서 나왔다면, 그 자체로는 생태적이다. 물론 데이트의 행위가 무엇인지가 다시 계산에 들어갈텐데, 생태 복지라는 눈으로 본다면, 이걸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냥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으로 데이트에 보조금을 준다면? 이젠 물가상승 등 인플레이션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행위가 된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행위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생태 영향도 평가 같은 게 필요할 것이다.

도서관을 짓는 문화복지를 생각해 보자. 그 자체로는 토건이다. 제일 좋은 것은, 도서관을 리노베이션하고 도서구입비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운영에 더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지만, 도로를 짓는 행위와 도서관을 짓는 행위를 비교한다면 도서관 쪽이 훨씬 더 생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기술적 분석 외에, 또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국가주의 즉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복지가 과연 타당한가 혹은 유일한 수단인가, 즉 복지의 주체에 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복지와 대별되는 개념은 회사복지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원하는 의료보험, 한국의 경우는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혹은 한전 등에서 지원하는 자녀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복지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기업 복지 쪽이다. 케인즈 시대에 한국은 물론 많은 나라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복지를 운용하든지, 기업이 운용하든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대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가장 큰 차별을 호소하는 게 바로 이런 기업 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세계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목격한 게, 2008년 도요타 해고 사태였다. 30대 파견노동자들이 주요 대상이었는데, 그들은 바로 며칠 전까지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의 직원이었다. 30대 파견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에서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건실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다음날 잡리스가 되고, 그들이 회사 아파트에서도 쫓겨나서 바로 홈리스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동경 우에노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파견마을'이라는 농성촌에 들어가 살았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으로 자민당 정권은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어주게 되었다.

과연 회사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에서, 그렇지 않고 국가가 그걸 담당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다. 그게 국가복지라는 견해가 가지는 긍정적 요소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걸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앙형의 문제가 생겨난다. 크게 보면 국가, 좁게 보면 중앙형 시스템을 복지를 통해서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장기적 관점으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지역 경제, 지역 공동체, 시민사회, 이런 곳들이 복지의 주체로서 더욱 강화되면서 분산형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좋은데, 중앙정부를 장악하고 그곳의 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늘리는 것은, 결국 시스템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다시 토건 시대로 돌아가는 위험성과 부패라는, 오래된 복지의 또 다른 얼굴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지역단체 즉 풀뿌리 단체들을 vehicle이라고 불렀다. 돈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 단체에게 주는 게 낫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풀뿌리 단체의 vehicle론이, 사실은 기초지자체 등 지자체의 '아웃소싱' 논의만 강화시켰고, 실제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지방토호의 친인척들이 급조한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복지영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던 미디어 액트를 다른 급조된 단체에게 운영을 넘기는 일 등,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vehicle 문제를 지난 수 년 동안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역의 풀뿌리 단체를 그냥 vehicle로만 보는 것은 문제이다. 중앙에서 결정하고, 돈만 지역으로 넘기는 것, 그게 스웨덴 등 성공한 복지 국가의 기본 시스템은 아니다. 의사결정과 집행까지, 시민사회 혹은 진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 그게 현 논의에서는 빠져 있다.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생협이나 지역활동, 공동체, 이런 얘기와 같이 진행되지 않는, 다만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그런 얘기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복지 체계가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삶은, 누구에게 얼마, 그 얘기가 전부가 아니다.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에는 금액 수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4. 국가복지 vs 생태복지, 답은 그린벨트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운동과 생태운동이 맞부딪힌 것 중에서 가장 크고, 논리적으로도 어려운 사건은 그린벨트 사건인 것 같다. 내가 지금의 보편적 복지 논의 혹은 국가복지 논의 진영에 질문을 딱 하나만 하라면, 그린벨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싶다. 만약 그린벨트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구 케인즈 시대의 개발체계의 복귀라고 할 것이고, 그린벨트를 보존한다고 한다면, 70년대와는 다른 복지담론의 등장이라고 할 것이다.

얘기는 이렇다. DJ 시절, 도시빈민 운동을 하는 주거권 운동 진영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

규모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고, 결국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DJ→노무현→이명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을 해체하게 되었다. 그게 지금의 '보금자리 주택'이다. 최근에는 그나마 공적 장치에서 민간으로 다시 개발권을 넘겼다. 그냥 민간회사가 그린벨트에 들어와서 자기 맘대로 임대주택 짓고, 자기 맘대로 팔 수 있게 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주거권 운동과 생태운동은 격렬하게 부딪혔다. 집 없는 자의 설움을 아느냐? 보금자리 주택은, 임대도 아니고 그냥 매입형 주택이다. 이게 바로 빌 클린턴 시대에 결국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모기지론 사태와 같은 논리를 갖는다.

생태진영에서는 그린벨트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결국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매입형은 여전히 정책 이름만 남아있는 껍데기 정책이다.

좁게는 지역생태나 국토생태 넓게는 지구생태에 대한 철학이 없이 기계적으로 해석된 보편적 복지는, 최악의 반생태적 전환을 다시 촉구하는 위험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물론 토건 예산을 빼서 그 돈으로 한다면 그 자체로는 생태적이지만, 지금의 민주당 정도의 토건에 대한 사유로는, 아마 토건도 하고, 다시 또 없는 돈을 빼서 복지 일부만 하는 시늉만 내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협, 사회적 기업, 지역경제,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의 지원금만 책정하고, 그것도 하겠다, 시늉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그린벨트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의 땅은, 짠 곳에 대량으로... 그린 벨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결국 그곳은 짠 곳이 아니다. 다만 개발제한 조치로 땅값이 싼 뿐이지.

한 가지 질문을 더 한다면, 지금이라도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내려가는 기관들의 부지 처리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다.

나는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일관되게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반대했다. 물론 나는 이런 시설들이 서울에 있고, 그래서 서울이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전이 한전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매각지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하는 경제적 맥락은, 관청 등 시설들이 빠지고 그 자리에 고층의 민간 상업시설이나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전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시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분산효과? 전혀 없고, 오히려 집중효과만 높다는 게 내 견해이다.

세종시, 혁신도시 매각지를 매각하지 말고 시민공원 혹은 생태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그냥 공유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 매각하지 않으면 세종시 건설할 돈이 없다고? 그게 바로 토건의 논리이다.

현재의 보편적 복지가 생태진영이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철학적 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토건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지시대'라고 할 때, 그들이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발제 Ⅲ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이 정 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⁵⁾

이 정 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1. 들어가며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경제적 분배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에 급속히 흡수되면서 여전히 복지국가적 요소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서 비롯한 생태환경 변화와 '녹색 자본주의'(green capitalism)로의 재편 과정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해 아직까지 체계적인인 계획이 수립되거나 사전예방적으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한국은 '복지국가'의 완성과 '녹색국가'의 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만큼 한국은 서구의 선진국가들이 단계적으로 발전시킨 국가모형을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환경친화적 복지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대응적 녹색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고 생태환경을 유지·보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형 복지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생태문제의 관심 또한 고조되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국가적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등장했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정책과 녹색정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두 정책 영역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도 별개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사회보장 중심의 복지 접근을 확장하여 '녹색복지'라는 '정책통합'적 접근을 수용하여, 현정부의 '녹색성장'의 대안으로 진보적인 한국형 '녹색복지'를 국가전략으로 모색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5) 이 글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민생정책 검토와 녹색복지 정책프레임 연구: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국회 진보개혁입법연대 의뢰, 2010.11)를 요약·정리한 것이며, 화순단체협의회회의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아래로부터 대안찾기』에 수록될 원고임을 밝힙니다.

2. 녹색복지의 개념 프레임

1) 녹색복지의 배경

21세기 들어와 생태계 파괴 및 기후변화로 발생한 인간복지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생태건강성과 인간복지의 상호소통 및 연계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작되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생태계파괴에 따른 인간 복지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인간복지와 생태복지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형 복지를 추구하고자 ‘밀레니엄에코시스템 평가단(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이라는 국제전문가연대그룹을 발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전부터 생태주의 진영에서 선도적으로 제기한 ‘녹색복지’ 개념과 이들의 접근방식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개념과 정책은 자본주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따라 국가별로 다른 경로를 밟아왔다. ‘복지’ 개념은 14세기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1601년 영국의 구빈법 제정 그리고 1941년 영국에서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사상과 이론이 정립되어 왔으며, 1980년과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생태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2006년에 스웨덴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석유독립’ 선언을 발표하면서, “녹색복지국가”(green welfare state)를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태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에너지 낭비와 환경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와 분배의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녹색복지와 녹색복지국가는 아직까지 폭넓게 합의된 개념으로 정립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점차 주목받고 있다.

2) 녹색복지의 개념 프레임

녹색복지를 지칭하는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며 규정하는데, ‘생태복지’(eco welfare)와 ‘환경복지’(environment welfare)로 표현하기도 한다. 녹색복지는 경제체계, 생태체계, 복지체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데, 간단히 ‘생태계와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인간복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재천, 2009).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녹색복지’(green welfare)로 통칭하여 사용할텐데, 사회복지에 생태주의적이나 환경주의적 관점을 접목시키려는 관점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녹색복지를 이해한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도 녹색복지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을 찾아 볼 수 있다. 녹색복지에 대한 개념규정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녹색복지에 대한 이론적 흐름을 검토해보자.

[표1] 녹색복지를 둘러싼 연구 경향

연구경향	주요 내용
생태주의 이념형 중심의 녹색복지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복지국가 패러다임 비판 ▪ 생태가치 기반의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 생태공동체 및 지역자립형 모델 대안 제시
생태주의 진영의 국가론적 접근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국가론 ▪ 복지에 대한 녹색의 실질적 포섭
생태주의 진영의 국가론적 접근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복지국가론 ▪ 복지국가의 생태적 전환(녹색과 복지 구분 후 결합)
복지국가론의 녹색 포섭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복지국가론 ▪ 복지국가의 생태이슈 포섭(복지 영역의 확장)

(1) 생태주의 이념형 중심의 녹색복지 접근

다수의 연구들은 생태주의 이념을 중심에 놓고 사회복지들을 재평가하고 생태 가치를 투영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태도를 보인다. 주로 생태학 혹은 생태주의 관점에서 기존 사회복지학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재편하고자 시도되고 있다(이준상 외, 2004). 이러한 흐름을 형성하는 공통된 인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화석에너지 중심의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등의 생태위기는 인간에게 비복지(dis-welfare)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둘째, 자유주의적이든 사회민주주의적이든 복지국가는 그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기여해왔다.

김만호(2002)는 생태주의의 복지이념으로 평등성, 상호보완성, 자율성, 연대성을 들고 있으며, 박영미(2004)는 전통적인 복지가치가 인간존엄, 평등, 자유, 사회연대였다면, 생태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복지가치가 생명존엄, 다양성, 주체성, 상호관련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형준 외(2010)는 현존하는 복지의 한계에 대해서 문제해결의 획일적 방법(제도의존), 공동체의 기능 상실, 불평등의 재생산, 생태계의 오염을 꼽으면서, 사회생태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탈지배성과 다양성, 지역성과 참여, 상호부조와 연대에서 녹색복지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는 근대 이전에 존재했던 ‘전통적 복지’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깔려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주의)의 억압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분권적 모델을 지향한다. 나아가 생태주의 일각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자조적인 생활양식을 해체한 근본원인을 ‘복지국가주의’로 상정하며, 복지국가 해체적이거나 분권화된 복지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정지용, 2008; 천규석, 2010). 이렇게 세부적인 차이 점에도 불구하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환경문제 소홀 및 생태위기 발생의 문제들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한면희, 2007; 김형준 외, 2010).

사회복지학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의 기여는 거대화되고 집적화된 현대사회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전략과 대안을 형성하는데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이준상 외, 2004). 정지용

(2008)은 녹색복지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지대조세계, 지역동화, 격정기술을 들기도 한다. 대안교육, 대안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조직화되거나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실험과 기획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을 요약하면, ‘생태주의적 사회복지’는 환경정의 구현, 공동체 사회, 개방사회, 통합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탈권위, 탈권력)를 정치적 원리로, 소규모 자립 경제(자급자족, 저생산, 저비용)를 경제적 원리로, 순환 구조, 소규모 공동체 문화, 결과적 평등, 모든 차별의 철폐, 전문가 집단의 탈권위를 사회적 원리로 삼는다(이준상 외, 2004). 이러한 대안경제와 지역생태공동체의 실현은 생태학적 관점 적용과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 형성이라는 실천적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생태주의 가치와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복지 접근은 활발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수준에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에서의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글에서는 국가의 녹색복지적 요소 역시 중요하게 간주한다.

(2) 생태주의 진영의 국가론적 접근

다른 생태주의 진영에서는 기존 국가론의 한계와 국가의 역할을 동시에 인정하는 속에서 녹색국가론을 새로 정립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가체제를 단순히 유지·활용하려 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해체하려는 기존 인식의 틀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성찰과 재구성을 통한 녹색화 전략을 추구한다”(정규호 2006:25). 이들이 보기에, 근대 자본주의 국가 성립 이후 20세기 들어 노동계급과 기층 민중의 재분배 요구가 복지국가들 가져왔다면, 20세기 후반 들어 심화되기 시작한 생태위기 속에서 녹색국가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녹색국가론’과 ‘녹색복지국가론’으로 대별된다. 먼저 ‘녹색국가론’을 살펴보자.

① 녹색국가론

정규호(2006)는 ‘녹색의 국가에 대한 인식 유형’을 구분하면서, ‘생태절대주의 국가’와 ‘생태무정부주의 사회’와 비교하여 ‘녹색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문제 원인이자 적극적인 해결자”로 인식하고, 문제해결 전략으로 기존 국가를 재구성과 성찰적 국가론(생태 민주주의)을 제시한다. 오영선(2006)은 녹색국가의 토대가 되는 녹색경제를 물질자본(화폐자본), 분배정의가치(복지자본), 생태가치(자연자본), 신뢰가치(도덕자본)의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설정한다. 이들은, ‘복지’는 ‘녹색’에 실질적으로 포섭되고(나아가 일체화되고), 복지국가는 과거의 국가론이므로 이제는 녹색국가론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다. 즉, 녹색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정치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주의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생태주의 측면

에서 생태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과제를 모두 포괄하면서, 정치·사회·경제적 생활의 총체적인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답순, 1990; 정규호, 2006:20~21 재인용). 그런데 이렇게 녹색의 포괄성을 인정하더라도, 모든 좋은 것은 녹색이라는 쌍끌이식 개념규정 때문에 현실 분석력과 적용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㉞ 녹색복지국가론

‘녹색복지국가론’은 ‘녹색국가론’보다 복지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한다. 홍성태(2009)는 ‘생태복지국가’를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는 복지국가로 보고, 민주주의, 복지주의, 생태주의를 핵심 요소로 삼아 복지국가의 생태적 전환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조명래(2006)의 녹색국가론은 녹색의 가치들 도구적으로만 취급하는 약한 녹색국가 유형으로부터 녹색의 가치들 통치의 내재적 가치로 설정하는 강한 녹색국가 유형까지 포함하는데, ‘녹색 복지 국가’는 ‘녹색 다원주의 국가’와 ‘녹색 정당 국가’ 다음의 발전 경로로 설정되는데, 환경 약자들 위해 환경재를 복지재의 일환으로 공급하게 하는 유형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그러나 조명래의 구분은 녹색국가 요소들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유형화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국가들을 그의 도식 중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 애매한 점이 있을 정도로 유형화 기준은 적확하지 않다.

이들과 유사한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및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도 있다. 구도완 외(2008)는 ‘생태 권위주의,’ ‘복지국가 생태주의,’ ‘자유주의적 환경관리주의,’ ‘생태 공동체/어소시에이션주의’로 생태 패러다임 유형을 설명한다. 복지국가 생태주의, 즉 생태복지국가 모델은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기능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과 같이 생태 근대화 성공한 국가들이 이 모델의 사례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홍성태, 조명래의 입장 역시 이러한 복지국가 생태주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도완 외(2008:100)는 “생태적 공동체/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을 바탕으로 개발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생태적으로 전환하여 생태복지국가들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국가를 넘어서서 생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자치연합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다. 그런데 녹색복지국가들 지향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이중의 전략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3) 복지국가론의 녹색 포섭적 접근

생태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한계 극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복지국가의 프레임에 생태문제를 포함시키는 연구 경향도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사회위험을 사회보장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학에서도 생태학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생태체계모델’(eco-system model)과 ‘생활모델’(life model)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생태체계모델은 인간과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적 관계들 중심으로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체계적 관점을 강조한 실천이론이며, 생활모델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환

경사이의 변화를 조정함으로써 적절한 생활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생태학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Turner, 1996; 이준상 외, 2004:327 재인용).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감지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차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2007년경 ‘민주적 발전국가론’(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사회투자국가론’(유시민), ‘사회연대국가론’(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 한국식 복지국가론들이 대안담론으로 제기되었다. 복지국가 재구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에서 제기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론’, 개혁적 소장학자 및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창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론’, 진보신당 등에서 주장하는 ‘삼차원 복지국가론’(혹은 ‘초록 복지국가론’)이 대표적이다.

특히 삼차원 복지국가론은 생태이슈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복지국가론과 차별화된다.⁶⁾ 이러한 입장은, 과거 서구 복지국가와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복지국가론은 성장 승배, 대량 소비, 판료주의 등과 서로 결합되어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한다(한겨레, 2010.8.16).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자립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노동운동 성과와 물질적 복지를 계승하는 ‘적색’의 가치와 환경운동과 에너지전환이라는 ‘녹색’의 가치를 결합한다.⁷⁾

이렇게 복지국가론 일부 진영의 녹색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한계와 역할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생태적 고려를 연계하는 모델을 지향한다. 그럼에도 복지국가 모델을 녹색국가로의 대체 대상이라기보다는 녹색복지국가로의 전환이라는 보완 대상이라고 인식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복지국가의 완성과 녹색국가의 완성의 이중의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국가’보다는 ‘녹색복지국가’가 보다 현실에 적합한 국가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복지, 노동, 생태의 단순 병렬식 결합으로 내적인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거창한 정치적 슬로건 이상의 실질적 내용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론적·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3. 한국의 녹색복지 정책프레임

1) 한국 녹색복지 도입 방향

앞서 검토한 녹색복지 프레임 유형은, 주요하게 열린 녹색(light green)의 입장에서부터 짙은 녹색(deep green)의 입장에 이르기까지 생태주의 이념적 기반에 따라 차별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중심의 생태공

6) 복지국가 소사이어티(2011) 역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다.

7) 일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노동연대 그리고 생태 전환의 구조는 앙드레 고르(2008)의 입장을 연상시킨다. 그럼에도 진보신당이 자본주의의 개혁과 변혁 사이에서, 그리고 생태주의의 적극적 수용과 소극적 수용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는 평가는 타당하다(서용표, 2009: 81).

동체의 역할 강조나, 국가의 역할 강조나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복지를 실질적으로 포섭하는 포괄적인 녹색이나, 녹색과 복지의 차이를 구분한 후 양자를 결합시키는 녹색복지나하는 또 다른 인식론적 문제에 봉착한다. 이들 단순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2] 녹색복지의 현실 유형

	복지≥녹색	녹색≥복지
국가 중심	A	B
공동체 중심	C	D

개략적으로 보면, 이상주의적 녹색이념은 D 모델을 지향하고, 현실주의적 녹색이념은 A 혹은 C 모델을 지향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현실주의가 아래로부터의 녹색화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다수의 이상주의가 국가의 특수한 역할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 앙드레 고르(2008) 역시, 필요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조절과 균형의 역할을, 자유의 영역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렇듯 양 진영 간에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공존하면서, 긴장과 타협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A→C→D 모델로의 전환에 기초한 단계론적 사고 역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 글은 양 극단의 모델의 장점을 고려하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녹색복지의 가능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복지와 녹색이라는 한국의 이중적 과제를 해결할 목적의 대안적 녹색복지 구상을 위해서, 절충적이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녹색(생태계)과 복지(인간)에 대해 ‘인식론적 탈인간주의’와 ‘실천적 인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생태공동체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녹색복지의 조종자와 촉진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복지의 녹색화’와 ‘녹색의 복지화’를 녹색복지의 내용으로 추구하고, 주체의 역할 측면에서 A와 C의 결합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의 녹색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상정한다. 이는 생태, 평등, 평화, 연대의 관점이 통합되어, 각 요소들 사이에 긴장관계를 최소화하는 녹색복지 도입 구상인 것이다.

2) 녹색복지와 녹색성장의 비교

이러한 대안적 접근이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검토해보자. 녹색성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두 개념은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의(WSSD)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녹색성장’이다. 이들과 비교하면,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원칙’은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정의로 제시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녹색성장은 “모든 존재의 복지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the Well Being of All)이라고 개념 정의 되어 있다. 이처럼 두 개념은 환경보호에 사회정의, 빈곤감소, 복지의 조화

를 강조한다. 그러나 많은 논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한국의 녹색성장의 실체는 경제성장지상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녹색화이다(이상현, 2009; 윤순진, 2009; 이정필, 2009).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제3조가 밝히고 있는 녹색성장의 기본원칙 대부분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복지와 사회정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굳이 찾자면,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의 제22조 제4항에서 지역균형과 저소득층배려의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2009)은 녹색성장의 민생정책을 “취약계층에 대한 녹색 사회 안정만 확충”이라는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녹색복지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주의에 일부 민생정책을 부차적으로 끼워 넣고 있을 뿐이다. 반면 녹색복지는 ‘생산의 녹색화’와 ‘분배의 녹색화’를 지향하면서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질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표3] 녹색복지와 녹색성장 패러다임 비교

	녹색복지	녹색성장
상황인식	생태위기+ 경제위기+ 복지위기	생태위기+ 경제위기
가치지향	생태, 복지, 노동의 조화	경제성장중심 및 녹색의 경제화
이론기반	정치생태학, 생태경제학, 사회복지학	환경경제학 및 주류 경제학
국가모델	녹색복지국가 및 시민주의 복지국가의 녹색화 ⁸⁾	녹색성장국가 및 녹색 신자유주의
정책목표	생태, 복지, 노동의 창조적 결합 녹색사회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경제성장> 고용창출> 환경보호
사업내용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복지 강화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일자리 전환 국가의 조정자 및 촉진자적 역할	토건산업 기술중심의 녹색산업 첨단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실행방식	녹색경제의 지역 거버넌스 및 지역 생태공동체 탄소세 등 친환경 세제 개편 및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전환	국가 친기업적 개입 및 시장의 자기조절적 방식 지역 생태공동체 억압 잔여주의적 복지정책

8) 녹색복지의 정치경제 모델이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이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질문은 별도의 개방된 논의가 필요하다. 생태사회주의 입장에서 한국 녹색담론의 전반의 평가는 서영표(2009) 참조.

4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

1) 녹색복지의 정책 영역

녹색복지국가의 거시적인 청사진만큼이나 녹색복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공공정책 설계 또한 현실개입에서 중요하다. 녹색복지의 개별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은 녹색복지국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복지제도정책의 녹색화와 새로운 녹색복지 제도정책의 도입을 염두에 뒀야 한다. 생태체계-복지체계-경제체계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 하면, 우리는 다음 표와 같이 각 체계와 조응하는 주요 이슈와 정책영역을 설정해 볼 수 있다.

[표4] 녹색복지의 정책 영역

	주요 이슈	정책 영역
생태체계	기후변화 적응	자연재해
		농업피해
복지체계	공중보건	기후관련 질병
	에너지 빈곤	에너지 복지
경제체계	녹색사회적 경제	녹색일자리와 녹색사회적기업
	기후변화 대응 및 전환기금	친환경 세계 및 기금

각각의 주요 이슈와 정책 영역은 상호연관되며, 여기서 다루지 못하는 다수의 이슈와 영역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영역들은 녹색복지의 중심 축을 구성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자연재해의 영향, 또한 그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질병에 직결되는 공중보건, 그리고 녹색복지의 물적 토대를 구성하는 녹색경제와 재원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각 정책 영역에 대해서 녹색복지를 도입하여 입법·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⁹⁾

9) 각각의 입법·제도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과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0:21~69) 참조.

[표5] 녹색복지를 위한 입법·제도개선 과제

과제명	취지	주요 내용
녹색성장기본법의 '녹색복지기본법'으로의 개정	- 성장과 개발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정책을 상생과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녹색성장' 개념의 폐기, '녹색복지' 개념의 도입 - 녹색복지국가전략 기본계획 수립
탄소세 및 녹색복지 재정 확대법	- 왜곡되어 있고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고 있지 못한 에너지 세제를 개편 -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수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확대, 에너지복지, 고용 전환의 지원 등의 녹색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확대	- 탄소 함유량에 따른 일관된 조세 비율을 가진 탄소세의 도입 - 조세 중립적인 방식의 탄소세 접근은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후 재평가 - 세수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확대, 에너지복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 전환 지원 등에 사용
녹색일자리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녹색일 자리를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적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의 전환을 지원	-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 고용 전환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 녹색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사회 경제 기반 구축
에너지복지법 및 효율형·전환형 에너지복지 확대	- 입법예고된 지경부 에너지복지법안 폐기 - 효율형·전환형 에너지복지로 페러다임 전환	- 에너지빈곤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지원과 에너지빈곤층 주택에너지전환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범위 확대
국가 기후변화 적용대책'의 수정 및 보완	- '복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기후분야 적용 분야 최상위 대책의 수정	- '녹색복지' 개념의 도입, 복지 전문가 참여 보장 - 각 의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 신설 - 사후 피해보상에 대한 포괄적 원칙 마련
농작물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 기후변화 상례화에 따른 대상재해 확대 - 피해보상 기준의 현실화 필요 - 미가입 농가에 대한 별도 대책 신설	- 기후변화 전망에 따른 대상 재해의 확대 - 대상품목을 주곡, 주야채 분야로 확대 -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통해 미가입 농가의 재해 피해 보상 기준 완화 및 보상금 증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공공보험의 보장성 확대 - 노약자 중심에서 저소득층에 관한 의견 확대	- 건강보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성 질환에 대한 예방 조치 포괄성 강화(피해 보상 규정 및 치료 지원을 수행) - 저소득층에 관한 별도 규정 정비

5. 나오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은 굳이 녹색복지의 관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반녹색복지적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미 후과를 동반하고 있는 실체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지역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긍정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녹색복지 관점을 도입하고자 시도했다.

이 글에서 다룬 정책영역들이, 비록 녹색복지 정책과 녹색복지 국가전략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다루지 못한 부분은 후속 연구과제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이러한 실천적 연구는 과거의 ‘좌파 신자유주의’와 현재의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적 오류를 바로잡고, 각각 왜곡시킨 복지와 녹색의 가치를 되찾는데,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임시방편적인 ‘시장결정적’ 방식이 아닌 진정한 ‘대전환’(great transition)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트, 앙드레(2008). 임희근, 정혜용 옮김, 『에콜로지카』, 생각의나무
- 구도완, 여형범(2008). “대안적 발전: 생태적 공동체와 어소시에이션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제69호 pp.83~106
- 김만호(2002). “지역사회복지에서 생태주의 이념의 특성과 유효성.”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제 12권 제2호 pp. 39~58
- 김형준, 한동우(2010). “사회복지의 대안적 이론체계로서의 사회생태주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29호 pp. 91~123
-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7
- 박영미(2004). “복지개념의 생태주의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pp. 333~354
- 복지국가소사이어티(2011).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들 위해서 기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2011.3.31. 논평)
- 서영표(2009). “한국의 녹색담론과 사회주의.” 『진보평론』, 제40호, 2009년 여름호 pp.71~99
- 오용선(2006). “경제의 녹색화, 녹색경제모델.” 문순홍 편, 『녹색국가의 탐색』, 아르케, pp.45~75
- 이준상, 김만호(2004). “생태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이념의 이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20집, pp.323~350
- 윤순진(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환경사회학회, 『ECO』, 제13권 1호 pp.219-266
- 이상현(2009).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환경사회학회, 『ECO』, 제 13권 2호 pp.7~41
- 이정필(2009). “MB 녹색성장의 진정성과 한계.” 레디앙(2009. 11. 25)
- 정규호(2006). “녹색국가에 대한 이론적 함의.” 문순홍 편, 『녹색국가의 탐색』, 아르케, pp.17~43
- 정지웅(2008). “생태주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2008.4), pp. 448~451
- 조명래(2006). “국가의 녹색화, 국가론의 녹색화.”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환경과생명, pp.191~221
- 천규석(2010). 『윤리적 소비』, 실천문화사
- 최재천 외(2009). “생태복지의 개념 및 적응모델 개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연구사업 결과보고서
- 한겨레. “한국사회 미래를 말하다”(2010.8.16)
- 한면희(2007). “환경정의 관점에서 복지사회 과제와 전망.” 환경정의연구소, 환경정의포럼 『사회적·환경적 불평등 해소들 위한 새로운 복지사회 패러다임』 자료집(2007.6)
- 홍성태(2009). “생태복지국가 연대를 향하여.” 『환경과생명』 동권 61호, pp.48~63
-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http://www.maweb.org/>

MEMO

MEMO

MEMO

MEMO
